미·일·중 격랑 속… 이재명표 '관리 외교'로 국익 챙긴다

'실행력' 시험대

국력 바탕 '극단 실용' 외교로 선회
미·일·중 입장 달라도 기준은 '국익'
갈등은 관리하고 사안마다 실리 챙겨
단기 안정엔 효과, 압박 커지면 한계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 시간)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린란드 편입이란 야욕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5년째 전쟁 중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2023년부터 무력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두 달 이상 갈등을 빚고 있다. 중일 간 갈등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모두 우리나라와 밀접하다. 한미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정과 협력 범위 확장으로 이제는 '포괄적 전략 동맹'까지 발전해왔다. 안보·경제 모두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단계까지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큰 국가인 만큼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몇가지 문제로 갈등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도 한국에는 고민거리다.

한일은 좀 복잡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역시 이웃 국가라서 정치·경제·문화·사회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강제징용 등 일제강점기 일제가 행한 일들,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동 등이 한국 국민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는 특정 진영에 서기보다 주요국 사이에서 국익을 기준으로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상 현안이 동시에 얽힌 상황에서, 실용외교가 실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력 상승 가능한 '극단적 실용주의'… 갈등의 '관리'로 얻어내는 국익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와 이전 정부의 차이점을 꼽자면 '극단적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다. 국력이 상승한 만큼 '가치 외교'보다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의미다. 국력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익을 기준으로 실용외교를 추진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는 새로운 노선보다는 위기 대응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가치와 이념을 전면에 내세워 진영을 선명히 구분하는 것보다, 사안마다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접근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화되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동시에 유지돼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실용외교'란 갈등의 관리이며, 이를 통해 국익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직전 윤석열 정부는 한쪽을 '선택'하는 '가치 외교'를 내세웠고, '자유·민주'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국가에 날을 세워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갈등 관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일중 간 입장은 다르지만 '국익'이 중심

주요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미국은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동맹 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자유무역협정(FTA)는 무력화되고, 관세 협상을 지속해야 했다. 통상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를 통해 관세를 25%까지 낮추고,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제시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나서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하는 중이다. 관세와 대미투자금은 미국으로 가지만,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대한다는 이득을 얻은 셈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해 접근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과거사'와 '협력'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접근한 바 있었으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지키기 쉽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둔 '제3자 변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한 합의를 뒤집을 경우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과거사·독도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인사인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중국은 예전과는 달라졌다. 경제 협력의 형태가 다르다. 이전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중국의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전략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또 정부는 중국이 북한과 밀착된 국가인만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등 양국 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실용외교, 현 국제정세에서 단기적 리스크 낮추는 데 효과적

결국 현재 국제 정세는 협력보다 갈등이 더 부각되는, 그야말로 '정글'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선택한 것도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셈이다. 아울러 실용외교는 단기적으로 외교 리스크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다. 불확실성이 큰 현재 정세에서 급격한 노선 변화나 감정적 대응을 피할 수 있어서다.

다만 원칙과 가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외교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강대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관리 외교'의 공간은 좁아진다.

한국이 균형된 외교와 가교 역할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미중일 갈등 등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국제질서 전환 속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韓,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

》1면 '혼란의 국제정세 속… '서 계속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와 만난 횟수까지 합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되면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경제 성장에 필요한 양해각서(MOU)를 여러 건 체결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등 민감한 문제도 일부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악화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어느정도 관계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것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갈등을 이어 왔다. 관광 통제에 이어 수출 통제까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양쪽 다 관리하며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익중심 실용 외교'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발언했다. /서예진 기자

연금개혁 과제 '산적'… 국민연금 구조개혁·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보험료율 인상·크레딧 확대 올해 시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연금특위 연장… 자동조정장치 논의
당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재점화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지속한다. 크레딧 제도(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장치) 확대, 지역가입자 지원 제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치권과 연계해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 구조개혁안도 논의한다. 답보 상태에 놓인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도 재개됐다.

◆'연금개혁' 올해부터 본격화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겠다"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 씩 인상돼 오는 2033년에는 13%까지 오르며,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늘어난다. 또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

군 복무나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군 복무 시 6개월의 가입을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한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했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씩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최대 50개월의 상한도 폐지한다.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한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감면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개편해 감액 구간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0만원'까지 상향한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도 지속한다. 여·야는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금특위는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재개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운용한 퇴직연금 적립액은 459조4625억원이다. 적립액의 77.1%에 해당하는 354조3758억원이 원리금 보장형에 집중됐으며, 원리금 비보장형에 투자된 금액은 105조867억원(22.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형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연 3.22%(DB형 3.46%·DC형 3.15%· 개인형IRP 3.05%)를 기록했고, 원리금 비보장형은 연 12.43%(DB형 7.69%·DC형 15.55%·개인형 IRP 14.04%)의 수익률 평균을 냈다. 비보장 수익률은 3~10년 수익률에서도 연 3.72~11.06%를 기록해 연 2.16~3.4%를 기록한 보장형 수익률을 모든 기간에서 앞질렀다.

비보장형 수익률이 보장형 수익률을 앞질렀음에도 80%에 가까운 적립금이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것은 투자 상품 선택의 어려움과 제도적 무관심 때문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